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2. 9. 2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14:00~17:1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55호~제160호, 제166호 및 보고 제43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55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56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7호 『삼성증권(주)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삼성증권(주)의 신용공여를 하는 담당직원들이 계열회사 임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보고자) OOOOOOOOOO(주) 임원 3인 이외의 나머지 직원들은 온라인상으로 신용융자 또는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한 경우 요건에 맞으면 자동승인이 되는 구조의 신용공여 사안임. OOOOOOOOOO(주) 3인은 10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별도 승인 절차가 있어 계열회사 임원인 것을 회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반면에 나머지 신용공여를 받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항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

- (보고자) 회사가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임원 정보를 신용공여 관련 시스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음.

○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했어야 했는데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가 집행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음.

○ (위원) 다른 곳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 (보고자) 다른 사(社)의 경우에도 현재는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보통의 경우 다른 증권사들은 계열사가 삼성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임원 범위를 인식하기에 용이한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워낙 많고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어오는 임원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된 것으로 보임.

○ (위원) 현재 시스템에서는 신용대출 신청한 이분들이 알아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 이미 해당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현재는 정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음.

○ (위원)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당사자가 그것을 밝히지 않더라도 표시가 되는 형태라는 말씀인지?

- (보고자) 그러함. 정기적으로 업데이트(update)를 하고 있음.
- (위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관련해서 질문드림. 000와 000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이나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계좌에 바로 들어가는 입출금이 되는 형식적인 자금은 특정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부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 (보고자) 배우자 재산이 혼용된 계좌에 대해서 그 배우자 재산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산정시 최대투자원금 등을 계산할 때 그것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계산하였음.
- (위원) 2013년 2월부터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고 있는지? 2021년 이전에는 삼성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가 없었는지?
- (보고자) 이전에도 삼성증권(주)에 대한 종합검사는 있었음. 다만, 인지한 시점이 2020년으로 최근에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2013년 즈음에 있었던 종합검사시에는 이 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음.
- (위원) 과거의 제재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동 건에 대해서 조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 (보고자) 과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사항은 대부

분 대주주의 영향력에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이 있었음. OOOO증권의 경우에도 계열사 임원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대출 건에 대해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는 있음.

○ (위원) 그러면 삼성증권(주)이 과거 제재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 (보고자) 과거 주요 제재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적극 개입해서 대주주 등에 대해서 자금지원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사례들임.

○ (위원) 인지한 경우에는 다 조치가 있었던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주관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 IPO2팀은 30일이 되는 날 처분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이 처분 시점이 주문일인지 아니면 결제일인지?

- (보고자) 주문을 내서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됨.

○ (위원) 그렇다면 이 건은 날짜 산정을 실수한 것인지?

- (보고자)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규정에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개월로 오인을 했다고 함.

- (위원) 신용공여 위반과 관련해서 과징금 처분만 있음. 혹시 신용공여 위반에 대해서 벌칙조항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벌칙조항이 형사적으로 공소시효제한이 있는 조항으로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지?
- (보고자) 신용공여 위반 사항은 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지만 본 건의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음.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피공여자가 아니었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음. 그래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그리고 금감원의 고발의무운영규정에 따라서 의무고발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않았음.
- (위원) 2013년경에 이루어졌던 과거 종합검사 이전의 행위까지도,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나 7년이었다면 사실은 그 행위시점이 그보다 더 전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면제나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셨나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임.
- (보고자)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태료와 달리 현재 제척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고발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검토는 할 수 없었음.



○ (위원) 한 번만 더 검토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58호 『퍼시픽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실질적으로 (주)□□□□이 설정을 해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이 펀드 수단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보고자) (주)□□□□이 호텔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운용사를 통해서 운용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배경으로 해당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검사결과 확인하였음.

○ (위원) 혹시 계열사간 거래나 계열사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회하려고 펀드 수단을 활용한 것 아닌지?

- (보고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계열사 거래와 관련되어 해당 펀드가 투자자금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 계열사 거래의 핵심이 되는데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가격, 예를 들면

적정한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지원을 했다면 공정 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임. 확인한 바로는 임대료 선정 부분에 대해 그 당시에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확인을 했음. 그래서 명시적으로 계열사 간의 거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음. 참고로 공정 거래법상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서 공시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경우에 펀드수수료 정하는 행위 까지도 저희가 OEM의 태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관리 보수 정하는 것은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 (보고자) 말씀대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다만, 투자자인 (주)□□□□이 수수료를 정할 때 단순한 협의를 넘어서 주도적으로 정하고 제안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운용에 관여하고 주도했다는 정황으로 인용한 것임.

- (위원) 운용사가 실효적인 협상 대상으로서 협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LP가 제시한 내용대로 따라 갔다는 취지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9호 『에이치디씨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0호 『캡스톤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61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과의 ★★★ 공동개발 협력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치원인사실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는 존재하지 않음. 금감원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의 \*\*\*\*년 \*월 \*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과의 ★★★★★ 공동개발 협력이라는 정보가 공개된 것이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위 언론보도는 □□□ 내부적으로 ★★★★★ 개발 및 위탁생산 협력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보도된 것이고 이후 양사는 협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고 공시를 한 것이어서 그때까지도 본 건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양사 간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 언론 보도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어서 이 언론보도로 ☆☆☆과의 ★★★★★ 공동개발 협력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비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 체결은 모든 협력사업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 NDA 체결 후 성사되는 경우는 약 10% 정도에 불과하여 NDA체결만으로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언론보도 당시까지 이 정보가 생성되지 않았고 공개된 정보도 존재하지 않음. 조치예정자의 □□□ 주식 매수는 ☆☆☆과의 협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볼 수도 없음. 금감원은 NDA 체결 직전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한꺼번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음. 조치예정자는 코로나 주가 폭락 사태 때 주책구입

등으로 여유자금이 없어 □□□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지 못했다가 이 시기에 여유자금이 생겨 그중 일부를 가지고 □□□ 주식을 매수한 것임. □□□ 신사업개발 등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장기 투자한 것이고 임원의 주식 매수는 공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수 규모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님. NDA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의 ★★★ 공동개발협력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 성사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음.

○ (위원) ☆☆과의 협업이 논의되고 있고 NDA가 체결되어 있다는 이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실제로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거래량도 폭증을 했는데, 진술인께서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폭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 (진술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NDA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마치 ☆☆과 □□□의 협업이 거의 성사가 된 것처럼, 회장님의 최종적인 결재만 남겨둔 것처럼 보도가 되었음. 그 정보의 내용이라는 것이 조치예정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미 형성되어 있던 정보의 내용과 보도가 된 내용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함. 저희가 말씀드리는 NDA 체결이라는 사실만으로 중요정보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임.

- (위원) 피조치자께서는 업무를 성공시키려고 진행하고 계셨던 분으로서 어차피 수많은 NDA 중에 하나를 체결할 뿐이고 이것은 의례적인 과정의 하나라는 의미로 이 업무를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함. 피조치자 입장에서는 ☆☆과 이 계약을 어떻게든 조금 더 진전 시킬 방향성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기대 가능성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셨을 텐데 이러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이용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 아닐지?

▶ (진술인)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는 NDA만 체결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안 될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치예정자가 업무를 봤다는 뜻은 당연히 아님. NDA 문구를 협상하고 NDA 계약 초안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이 정도의 단계에서 마치 이것이 앞으로 □□□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주식을 사서 여기에서 상당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이때 알고 있었던 정보, 그때 있었던 상황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임.

- (위원) 취득한 주식은 처분했는지?

▶ (진술인) 계속 보유하고 계심.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2호 『(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163호 『(주)현진소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함.

▷ 진술인(제162호 관련)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의 대표이사 △△△임. 저는 2006년 대표 이사로 취임해서 현재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제조회사 (주)○○을 경영하고 있음. 저의 무지와 착오로 (주)○○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자본시장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음. 금번 자진신고 과정에서 지분공시에 관한 저의 안일함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음.

○ (위원) 원래 해당 지분을 퇴임한 前임원 ▷▷▷로부터 양수 하셔서 그것을 ▽▽▽ 명의로 명의신탁 해놓으셨던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가 퇴임을 하면서 진술인에게 이것을 양도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 (진술인) 저희가 처음에 셋이 같이 모여서 사업을 시작했음. 그런데 그분이 중간에 중병이 걸려서 본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음. 그래서 퇴사할 때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본인이 가져갈 사항이 아니니까 회사에 돌려드리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돌려주겠다고 했음.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바로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두려워서 다른 쪽에 기탁을 했다가 새로 올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생각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음.

○ (위원) 시장에서 팔고 나가도 됐을 텐데 이것을 굳이 대주주한테 다시 넘긴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인) 당시 사업 초기에는 시장에 팔 수 있는 가치의 지분이 아니었음.

○ (위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를 당하셨는데, 과세 당국이 과세를 했다는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 아닌지?

▶ (진술인) 과세 당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과세를 했음.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결국 세금을 전부 납부했음.



▷ 진술인(제162호 관련)이 퇴장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4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65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7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66호 『(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감독규정에서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고발에 따라 동일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시어 선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변경되었고 감독당국 및 감사인 등이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이전에 회사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하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최대한 과징금 부담을 경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회사 M&A 과정에서 실사를 진행하셨을 텐데, 실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

▶ (진술인) ○○회계법인을 실사법인으로 해서 실사를 진행했음. 그런데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고,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실사과정 중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신뢰하고 진행했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시 저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했던 최대주주로 영업실적과 관련한 압박도 없었고 그 이외에 상장 여부, 재무상황 및 차입계약 등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왜곡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었던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인 000 前대표이사에게 허위매출을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 2018년 8월경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이후 미송재고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알게 된 바는 있으나, 이는 제약업계에 만연한 부적절한 영업관행으로만 생각하였지, 회계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수년간 외부감사를 수행하였던 외부감사인도 파악하지 못하였고 회사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재무실사를 수행했던 00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도 미송재고를 의미하는 무이동재고를 언급하고 있으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저에 대한 처분을 정하심에 있어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000이라고 함. 저는 (주)0000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재무·회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오니 넓은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진술인) △△△ 진술하겠습니다. 저는 ○○○ 회장한테 도매 쪽 업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던 중에 허위매출을 확인하게 되어 ○○○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음. 그러나 ○○○ 회장은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음. 2020년 3월에 경영진이 교체되자마자 저는 ○○○ 회장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경영진에게 허위매출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고 5월이 되어서는 새로운 경영진 쪽에서 저한테 재무제표 재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여 과거부터 있었던 허위매출들을 다 추출해서 지정된 회계법인에 전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음.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해 주셔서 부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저는 ●●●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과대매출을 지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사안의 성격상 당시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제 선에서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참석했음.
- (위원) △△△ 진술인께 질문 드립니다. ○○○ 최대주주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2017년에 주로 허위매출이 발생했던 것이 OOOO라는 제품인데 이때 한 7~8년 팔아야 소진되는 재고가 생산되었음. 이는 OOO 회장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제재대상자 △△△에 대해서 자진정정을 시도한 점 등을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위원) 동의함.
- (위원) 동의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보고안건 제43호 『제약·바이오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14분 폐회)